

제429회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초대형 산불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보고

상정된 안건

1. 초대형 산불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보고 ..... 1

(14시07분 개의)

○소위원장 김형동 의사일정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1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형동 위원입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가 원활하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산불특위 제도개선소위 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산불특위 제도개선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첫 회의로 산불 관련 정책과 진화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및 산림청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초대형 산불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국방부 장동훈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배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초대형 산불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보고

(14시08분)

○소위원장 김형동 의사일정 제1항 초대형 산불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평소 재난관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

시는 김형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산불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자료에서 추가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수습 과정에서 재난사태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총 1조 8809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였고, 생활안정지원금과 성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5개 지역 마을 단위 복구를 추진하는 등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불예측시스템을 통하여 위험구역과 잠재적 위험구역을 도출하고 잠재적 위험구역은 실행 대기, 위험구역은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단계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과 휴대전화 미소지자, 통신장애 지역 주민 등에게도 재난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중대본 중심으로 산림청과 군, 소방, 자치단체 등 산불 관련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산불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 대피 분야는 별도로 계획하여 대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가을철 산불 준비 태세를 합동으로 점검하고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형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불 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청은 지난 대형 산불의 교훈을 바탕으로 국가총력 동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교육 훈련과 장비 보강과 같은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소방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는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쪽 산불 대응 현황과 2쪽 최근 산불 동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하단의 개선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 산불로 확산된 이후에는 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산불을 사전 예방하고 초기 대처하는 통합대응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지역으로 산불 확산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방어적 대응에서 벗어나 산불이 민가, 시설로 확산되기 전에 적극 차단하는 공격적 전략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제기된 인력과 장비의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자원의 범용적 활용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산불 대응역량 강화방안입니다.

먼저 국가 중심의 총력 산불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우선 산불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방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산불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산불 대응 유관기관 공동 대응을 위해 대응·협력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현장에는 최정예 산불진화대원으로 이루어진 소방청 중앙119산불진화대를 운영하고 시도 소방본부의 산불재난특수대응단을 추가 신설 및 확대하여 산불 대응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강풍 등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동원령을 발령하여 대비하고 동원 자원의 규모도 두 배 이상 확대하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인명 중심의 산불 대응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산불이 도심으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인명구조와 시설물 보호에 가용 소방력을 최우선 투입하고 동원되는 자원은 소방의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지휘·통제하겠습니다.

4쪽 산불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위와 같은 소방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 역량과 기반시설, 장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소방에서는 최근 5년간 전국 소방학교에서 252회에 걸쳐 2만 2000여 명에 대하여 산불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첨단 지휘훈련시스템, 실화재 훈련 등을 통해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헬기, 산불전문진화차 등 산불에도 활용성 높은 다목적 고성능 장비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산불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9만 2000여 명의 의용소방대가 산불대응의 한 축을 이를 수 있도록 산불 예방·진화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산불이 빈번한 강원·경북 지역부터 산불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산불은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주민 대피 등 산불대응훈련을 정례화하고 산림 인접 주민이 스스로 초기 진압하는 비상소화장치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청은 지난 산불 교훈을 철저히 되새기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형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존경하는 김형동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장 김인호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과 이재민들 그리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산림청이 준비한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 현황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산불대응 평가입니다.

산불예방 측면에서 살펴보면 올해 봄철에는 31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최근 10년 평균보다 낮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2배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담뱃불 실화, 작업장 실화,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등이 있었고요. 이번 영남지역 산불 역시 성묘객 실화와 영농폐기물 소각, 예초기 불티 등 사람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소나무가 많은 지역적 특성과 빽빽해진 산림으로 인해 산림 내 연료량 증가, 임도 부족으로 인한 진화자원 투입 제한 등 산불에 취약한 산림구조가 산불을 대형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산불진화 측면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이상고온, 최저 강수량, 초속 27m의 태풍급 돌풍을 타고 역대 산불 중 가장 빠르게 확산하여 대응에 한계가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3월 22일 하루에만 2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가용자원을 충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분산되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산불진화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대형 산불로 장기화될 때 주야간 교대인력이 부족하여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산불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 주기 재난관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입니다.

먼저 산불예방과 감시 부분입니다.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지자체가 입산통제구역 확대와 해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행안부, 농식품부, 농진청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을 낸 자에게 과태료와 벌칙 등 처벌도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위험지역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산불예방·산불진화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설물에 인접한 수목이 산불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산주가 임의로 벌채를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지자체가 산불위험수목을 제거하는 산불예방사업 추진 시 산주의 동의가 없어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CCTV, ICT 플랫폼, 드론, 농림위성 등을 통해 지상·공중·우주에서의 입체적인 산불감

시망을 구축하고 대형 산불 위험단계에 따라 대비태세도 강화하겠습니다.

AI 기반으로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예보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대국민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민간 등산 앱, 휴양예약 앱, 스마트산림재난 앱 등을 활용하여 실용성 있는 홍보채널도 확대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산불 대비·대응 부분입니다.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비하여 중대형 산불진화헬기를 확충하고 고정익 항공기를 활용하는 등 공중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봄철 산불에 대비하여 1만ℓ 담수량을 갖는 대형 헬기 3대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행안부, 과기부와 함께 범부처 R&D로 개발한 한국형 다목적 산불진화차도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등 산불 정예인력을 확충하고, 시기별로 운영 중인 산불재난 현장대응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연중 대비태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진화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군헬기 조종사 교육, 전국 산불진화합동훈련 등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진화대원의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고품질 진화장비를 보급하고 안전장비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력회복 차량을 도입하여 현장 진화대원의 피로도 회복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존 평지 평균풍속에 최대 순간풍속, 산지풍속 등을 추가 반영하여 산불확산 예측을 높이고 극한기상 시 야간산불 화선 파악을 위해 군 정보자산을 활용하는 등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산불대응체계 축소 등 개선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현장지원 강화 등 국가 총력대응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내용입니다.

산불피해지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원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는 피해 정도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자연복원, 생태복원, 조림복원을 병행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과밀한 숲, 침엽수 단순림은 숲 가꾸기, 내화수림대 조성 등을 통해 산불에 강한 숲으로 전환하고 임도 역시 재난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초대형 산불 재발방지대책에 적극 반영하여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 걸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형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 가지고요. 먼저 간단하게 기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형동 예, 말씀하시지요.

○차규근 위원 산림청장님, 2023년 7월 달에 산림청에서 ‘임도의 산불진화 효과성 조사 용역’이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차규근 위원 거기 86페이지에 보면 제도개선 사항을 이미 마련해 놨습니다. 2023년도 7월이고 산불보고체계 개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건의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까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오전 중으로 알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답을 못 받았습니다. 빨리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간이라도 확인해서 물어볼 수 있도록요.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차규근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2005년도에 남원 산불, 산림청 책자에 의하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산불 나면 산사태가 200배 높아진다는 그 언론보도의 근거가 된 이 책자, ‘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근거 보고서를 요구했더니 보고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서가 없으면 기본 데이터, 그 관련되는 자료라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뭐 그것은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남원 산불 정확한 좌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2005년도에 산불이 났지만 그 전과 그 후에 별목이 되었기 때문에 산사태가 더 유발된 것 아닌 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 남원 산불 위치를 정확한 좌표 또는 그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지금 회의 도중이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전과 그 후에 별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형동 산림청장님, 방금 차규근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 회의 중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형동 청장님, 이번에 새로 취임하셨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형동 그러면 아까 저희 위원들한테 인사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고맙습니다.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형동 위원님들 의견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유롭게, 제한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지금 우리가 산불피해 관련해 가지고 제도개선소위잖아요. 세 분 중에 산불 관련된 제일 전문가를 누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소방청장님이 산불의 제일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님이 그럴까요, 산림청장님이 그럴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네. 어떻습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제일 전문가는 산림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희 위원** 아, 그래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이만희 위원** 청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축하드리고.

혹시 경북 산불피해 지역에 한번 가 보셨나요?

○**산림청장 김인호** 안동과 의성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의성에……

○**이만희 위원** 안동하고 의성. 가신 김에 그 가까운 데, 청송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그 피해 지역을 한번 같이 둘러보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시간상으로 제약이 있었을 텐데요.

산불 제도개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산불에 관해서 앞으로 누가 산불 전체를, 특히나 진화와 관련해 가지고 책임을 지고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지휘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제기됐었고.

조금 전 산림청장 보고에도 보면 대응 단계별 지휘권이 변경되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데 지금 산림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산림청은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아마……

○**이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휘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관계 기관, 관계 기관이라는 게 결국은 소방청이나 행안부가 될 텐데 서로서로 협의를 하신 그런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오신 분들 중에서 산림청 간부님들, 청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그 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적이 있나요?

○**산림청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재난통제관입니다.

○**소위원장 김형동** 누구시라고요?

○**이만희 위원** 그냥 거기 서서, 마이크 있으면 누가 주시면 좋을 텐데.

○**소위원장 김형동** 발언대로 나오시든 마이크를 사용하시든……

○**산림청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입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산불 대응체계 전반에 걸쳐서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지휘권 문제에 대해 한정해서 제가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산림청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지휘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권 문제도 지금 현재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지휘권을 강화하면서 또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지휘권이 정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누가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현 체제가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산림청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예, 그것도 지휘체계가 현재 총 4단계로 구분돼 있는데요. 지휘 단계도 좀 축소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휘권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 있다고 그래서 위험할 때는 국가가 먼저 개입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끼리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소방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위원님 주신 말씀의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불을 끄는 것은 신속하게 화재 진화를 하는 것만이 대형 산불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특별한 경우, 방화라든지 어떤 특이한 경우에 의해서 대형 산불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지만 저도 한 30년 넘게 현장에서 직접 불을 끄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산림 인접에서 작은 화재로 시작해서 큰 화재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절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른 신고체계가 있어야 되고 또 곳곳에 불을 끌 수 있는 자원들이 배치돼 가지고 즉시 불을 끌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많이 하는 조직이 불을 가장 잘 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소방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산림 부서도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각각의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 현장에서 최대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 지휘체계를 구성하고 불을 끄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원을 잘 동원해서 불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참고로 지금 산불 관련된 신고 건수, 현장 출동 시간들 보면 소방청은 평균 17분 나옵니다. 그렇지요? 산림청의 핵심적인 산불 진화와 관련된—이것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재난특수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48분 그리고 공중진화대는 헬기 얘기하는 거겠지요. 한 3시간 정도가 현장 도착에 걸리는 시간들입니다.

특히 또 이 자체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시장·군수 이렇게 초기 단계부터 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산림의 화재 관련된 현상들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또 여러 가지 발화 요인들도 이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져 있고 산림의 변화도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산불 자체가 가지는 특성 또 진화가 가지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시장·군수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휘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시장·군수 이런 자치단체장들한테 지침을 부과한다면 그와 관련된,

산불 진화와 관련돼 있는 최소한의 전문교육들은 이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점들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형동** 이만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청장님 그리고 산림재난통제관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산불 진화와 관련된 지휘 단계 축소는 지금 검토 중이나 아직 전체적인 지휘권을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결론도 난 바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논의는 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산림청장 김인호** 지금 예정으로는 아마 9월 내에 최종 내용이 정리돼서 대통령님께 보고드리는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청장님한테 새로 부임하신 뒤에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산불피해 면적에 따라서 지휘권이 옮겨 가는 것, 이것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도 결국 지휘권이 피해 면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특히 지자체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산불이 발생하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데 총동원되기 때문에 진화에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휘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지휘권을 가진 자가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반드시 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행안부에서 누가 오셨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재난안전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오셨네요.

이것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불이 났을 때 사실은 마을 방송이 안 됐어요. 핸드폰이 안 됐어요. 핸드폰에 재난 안내 문자는 계속 들어온 사람들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작 피해 지역의 경우 통신이 두절됨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외지에 있는 가족분들도 안부를 묻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정작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 산불이 어느 지점에 와 있고 내가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확인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중에는 3단계 중첩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지금 방지대책이라고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로 주민들의 재난정보에 대한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산불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전기와 통신이 두절돼서 그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기와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연락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대형 산불의 경우에는 닥친 이후에 대피를 하면 늦기 때문에 저희들 대책의 핵심은 대형 산불이 어디로 번질 것 같다는 게 예측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혹시 산불이 안 가더라도 8시간 전, 5시간 전에 대피를 시켜야 된다, 지금같이 확산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늦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들 중에 민방위 경보장비가 있고 또 지진해일 경보장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방송, 가두방송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민방위 장비 지진해일 장비 등도 산불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쓸 수 있는 대책들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 어떻게든 알려 드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소방청에서는 의용소방대, 산불예방진화대 등 이런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의용소방대뿐만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그다음에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체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데 동원되었다가 다음에는 마을로 내려오는 산불을 일단 끄고 나면 마지막 잔불 정리하느라고 모두 다 산으로 동원되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산에 올라가 봤지만 산불에 대한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마을의, 그러니까 시군 단위의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물론 농촌 지역의 경우는 이런 자원들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소방 관련한 교육, 진화 교육 이런 것들이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분들이 잔불 정리를 하려 올라가면서 저희한테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여름이니까 그냥 일반 인견이든 나일론으로 된 옷을 입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잔불 작업하다가 불똥이 튀면 바지에 이렇게 구멍이 난다든가 그게 또 불똥이 붙은 상태에서 몸에 턱 붙어 버리면 작은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검정색 진화복 같은 것을 입고서 올라갔는데—두터운 무명으로 된 옷이요—일반 주민들은 가장 긴 시간 잔불 정리에 동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어떤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마을을 지킨다는 오로지 일념 하나로 그냥 산에 올라가서 불을 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 대한, 마을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진화에 동원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예비군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화와 관련된 산불의 속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최소한의 안전장구들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군에서 여분으로 가지고 있건 아니면 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건 이런 장비들을 좀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일단 먼저 답변드리고 소방청장님의 답

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가면 아까 소방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의용소방대, 소방과 관련된 민간단체가 있고 또 일반적인 재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재단, 잘아시는 것처럼 경찰과 관련돼서 또 조직들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새마을이나 여러 가지 관변단체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과 관련된 교육은 좀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산불뿐만이 아니라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것도 교육이 필요하고 또 산불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고, 지금 대형 재난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민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그분들께 어떤 장비를 드리고 또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 드릴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패키지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장비를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소방청장 허석곤 소방청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은 한 3979개대 해 가지고 9만 3000여 명이 지금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법에 따르면 ‘소방의 화재 진압업무를 보조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처음에 의용소방대원으로 신규 가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년에 36시간에 대해서 화재진화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용소방대원들은 평시에도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소방관을 도와서 화재진화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은 어느 정도 갖췄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을 계기로 해서 이분들의 역할을 화재보조뿐만 아니고 산불진화에도 보조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법을 개정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불진화에 실제 소방관을 진화보조를 하고 또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 대피를 하고 또 저희들이 기재부 쪽에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비상소화장치를 각 마을마다 설치하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치를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장비를 활용해서 내가 사는 지역은 내가 지킨다 하는 개념으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소방에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함으로써 산불 대응의 역량을 높이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추가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일반 화재의 경우는 소방청에서 누구보다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이든 일반 불이든 간에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총동원되어야만 된다. 정말로 내 땅에 걸어서 움직이면서 뭔가 조금 활동이 가능한 분들은, 전체가 나서서 산불진화의 자원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예비군체계를 짜지 않으면 저는 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것을 막아 내기는 무지 어렵다.

결국은 이번의 산불도요 아주 적은 양이지만 비가 왔었거든요.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 상승세를 약간 좀 꺾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언제까지 우리가 비에 의존하면서

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우제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군 체제로 전환되도록 상시적인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짜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번에도 경북에서 산불이 났을 때 마을 주민들이 농약살포기라든지 가까이에 있는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자기 가정을 지키고 마을을 지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활 속에 침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안부하고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소방도 함께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형동** 마치셨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차규근 위원** 안 하십니까?

○**안도걸 위원** 하십시오, 먼저.

○**차규근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형동** 차규근 위원님 하십시오.

○**차규근 위원** 감사합니다.

산림청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고맙습니다.

○**차규근 위원** 오신 지 한 2주 정도 되셨는가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업무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산림청장 김인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아무래도 올해 오셔서 가장 시급하게 업무 파악하여야 될 내용이 산불과 산사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맞습니다.

○**차규근 위원** 동의하시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동의합니다.

○**차규근 위원** 올해……

○**산림청장 김인호** 산림재난으로 심각했으니까요.

○**차규근 위원** 예, 유례없는 산불과 산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예.

○**차규근 위원**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올해 경북·경남·울산 대형산불 피해 내역인데 보시면 경남 산청·하동이 경북 의성 이런 지역보다 하루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경북은 3월 22일, 산청·하동은 3월 21일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날짜도 경북은 28일인데 산청·하동은 30일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피해 면적이 훨씬 적습니다. 보이시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차규근 위원** 혹시 그 원인 보고받으셨습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받지를 못했습니다.

○차규근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 부분 아직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찌 보면 아주 본질적인 내용을 좀 함축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숲가꾸기나 여러 가지 정책들과 관계가 있는데요. 다른 강풍이나 바람 세기나 이런 요인들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산청·하동이 경북 지역보다 이렇게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활엽수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장님도 산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엽수가 내화, 불에 더 견디는 습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리고 산림청에서 앞으로 세울 대책 중의, 추진할 대책 중의 하나가 내화수림대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예.

○차규근 위원 내화수림대는 침엽수가 아니라 활엽수 위주로 조성이 되는 것이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맞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숲가꾸기, 숲가꾸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맞습니다.

○차규근 위원 임업을 위해서 또 직경이 큰 나무를,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숲가꾸기가 필요하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숲가꾸기가 산불을 더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또 생태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숲가꾸기 그 자체를 보더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숲가꾸기가 천편 일률적으로 침엽수만 남기고 그 사이의 잔목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의 참나무 같은 활엽수도 다 제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이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 긴급 산사태 좌담회를 했었는데요. 한 이 후에 메일이 왔습니다. 그 좌담회에 참석했던 영월에 있는 임업인인데 본인이 과거에 20년 동안 전국의 산을 돌아다녔고 지금은 영월 지역에 10년 이상 정착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산사태 피해를 본 사실이 있고 또 전국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는 메일을 보내 오셨길래 제가 지난주에 영월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보여 주신 자료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거의 침엽수만 남기고 마구 자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임업인이 조성한 숲은 골고루 차광이 되도록 차광률을 맞춰 자릅니다. 한 70% 정도 빛이 들어오면 침엽수가 활엽수가 공존하면서도 두릅이나 이런 임업 임산물을 잘 채취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국에 한 20년 동안 돌아다녀 본 결과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가에 있는 나무들, 침엽 소나무나 가에 있는 것만 남기고는 가운데는 그냥 참나무도 다 잘라 낸다는 겁니다. 이 부분 향후에 현실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한번 진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장님, 제가 또 현장에 가고, 저도 들은 이야기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도 확인

도 했는데 뭐냐 하면 그 별목한 나무들이 그냥 방치됩니다. 잔목이든 참나무든 숲가꾸기하고 나서 그것을 아예 치우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바짝 말라 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는 엄청난 땔감이 되는 거지요.

숲가꾸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동의합니다.

○차규근 위원 그 부분 숲가꾸기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철저하게 한번 현실과 개선점이 뭔지 점검하셔서 다음에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산림청장 김인호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리고 청장님, 제가 산불특위 준비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 3월 22일에 처음에는 사람이 세계 불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첫날은 강풍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기 진화 가능성이 높았는데 못 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길래 이게 맞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니까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인한 진화자원 부족 상황과 이상 고온, 악성 기후, 지형적 특성 등 산불 확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 화면, 이것은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위험확산예측시스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3월 22일 3시부터 3월 22일 9시까지는 아무런 위기경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상 고온이나 악성 기후나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면 예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한번 이 올봄 산불이 발생한 첫날에 산림청이 대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청장님, 철저하게 진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알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소방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산불 관련 기관이 어디입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지금은 소방이 가장 신속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렇지요. 아까 전에 질의 내용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소방관이 17분 그리고 산림청의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시간 48분, 산림청 공중진화대 3시간, 시·군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8분 그리고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기의 골든타임은 지금 50분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는 이런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소형불에서 대형산불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을 못 했기 때문에 대형산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도시의 화재는 산림화재는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소방청의 업무자료 내용을 보면 3페이지에 이런 내용

이 있습니다.

산불진압 그 위에, 맨 위의 부분에 ‘현장 도착 즉시 입산하여 진화작업을 위해 업무 범위 명확화’.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까 17분 내에 소방관이 가장 먼저 산불 현장에 도착을 하더라도 현장 도착 즉시 입산해서 진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소방청장 허석곤** 지금 현재 소방에서는 화재를 갖다가 임야 화재를 분류할 때 ‘산불’과 ‘뜰불’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지적해 주신 것이 둘불이 산불로 옮겨 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산림 인근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화를 이렇게 바로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조금 더 확산이 돼 가지고 산으로 산불이, 진화가 되고 산림청에서도 산림자원이 동원되고 이랬을 때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공중 진화는 주로 산림청이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변에 있는 민가 보호에 주로 임무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번에 경북 산불이나 산청 산불을 봤을 때 소방의 역할도 좀 더 공격적으로 산림으로 진입을 해서 좀 더 높은 곳까지 진입을 해서 불을 끄는 것이 조금 더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차규근 위원** 빨리 법 개정이 되어야 멀뚱거리지 않고 산림청에 관계되는, 산림청의 불 끄는 분들이 오기 전이라도 소방관들이 바로 산에 진입해서 더 빨리 끌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 거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규정을 명확하게 하면 소방대원들도 이 업무가 당연히 내 업무고 내가 더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이 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업무 범위의 명확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청장 허석곤** 지금은 지원 업무로, 소방 지원 활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극적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차규근 위원** 제가 이번 며칠 전에 지원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산림화재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향후에 국회에서 논의될 때 소방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한 의견을 내셔 가지고 공론화되어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좀 더 역량을 높이는 데 법령 개정을 통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리고 소방청장님 4페이지에 보면 역량강화 기반조성 그래서 현 소방 교육기관 인프라 활용해서 산불에 강한 소방력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옮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아까 산림청에서도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국립산림재난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 훈련 제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무한정 가용할 수 있다 그러면 소방청에도 센터 운용을 하고 산림에도 운용을 하고 또 다른 데도 운용, 지자체도 운용하고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의 화재 진압에 가장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교육기관 인프라 정도가 산림청 직원들의 산불 진화, 산림 화재 진화에 대한 교육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 거기까지 커버하기

어려운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현실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교육을 담당하기에는 역량이, 케파가 안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교 해 가지고 총 15개 소방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6만 7000명에 대한 소방대원에 대한 교육과 의용소방대원 일부 그리고 민간자치소방대원의 일부 교육을 하는 데도 사실 자원 역량이 거의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청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공주의 소방학교와 천안에 있는 학교,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정상화시키고 능력을 좀 더 키우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조금 더 민간 교육 쪽으로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차규근 위원** 지금 현재도 소방청의 소방교육기관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일단 그 부분도 보완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방에서 산불에 강한 소방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산림청에서 또 별도로 산불 관련되는 교육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 향후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국가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장님, 올해 4월 달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직후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한 자료에 근거해서 이런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산불 피해지역 산사태 발생 위험 200배 높아’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제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지난 산불특위에서 한 달 반 전에 올봄에 산불이 났던 산청에 갔습니다. 왜 산청에 갔습니까 산청은 올해 산불이 났지만 또 산사태도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 이유는 진짜 산불이 났기 때문에 산불 피해지역에서 산사태가 많이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는가라는 게 궁금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시천면 사진 좀 띄워 줘 봐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산림청에서 브리핑을 한 장소 뒤쪽이 시천면입니다. 저 시천면 사진을 보시면, 시천면이 올봄에 산불이 난 데예요. 그런데 보시면 저 산 위에는 산사태 흔적이 없고요. 제 아래 쪽에 약간 트여진 데, 저기 잔디밭 같은 그 쪽에서만 산사태가 났습니다. 저는 이상했어요. 산불이 났으면 산사태 위험이 200배 높다는데 그러면 산불이 난 데는 다 산사태가 나야 되는데 멀쩡해 보이는 겁니다, 물론 저기도 소규모는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자, 그런데 그다음에 부리·모고리,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부리·모고리 산사태 지역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장님 부리·모고리 산사태 지역은 올 봄의 산불 지역이 아니라 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알고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차규근 위원** 거기 가기 전에 제가 접한 해외 논문이 있습니다. 그 해외 논문을 보면 FAO, 유엔식량기구인가요? FAO 거기 자료도 있고 오른 쪽이 해외 논문인데요. 저 내용

도 뭐냐 하니까 별목하고 5년 내지 15년이 가장 산사태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별목하고 그 이유가 산불 등으로 별목을 하게 되면 별목한 나무가 뿌리가 천천히 썩기 시작하는데 그게 한 5년 후에 가장 본격적으로 썩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는 새로 조림한 나무들이 뿌리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목지가 5년에서 15년 사이가 더 산사태 위험이 높다라는 해외 논문도 있었고 FAO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많이 난 부리·모고리 지역이 2009년도에 산불이 난 지역이었습니다. 2009 플러스 15 하면 2024, 2025 거의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그 이후에 많은 별목이 있었고 조림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다수가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좌용주 교수님 SNS 메시지 좀……

청장님, 경상국립대 좌용주 교수님이라고요 이분이 지자체에서 산사태 취약지구 심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SNS에 글 올린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하면, 글자가 좀 작아서 미안합니다만 본인이 산사태 기초 조사인가 실태조사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때 토양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질 요소 평가, 지질 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키거나 그런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 제대로 지금 반영이 돼 있는지도 청장님 한번 파악해서, 지금 보내셔도 좋습니다. 한번 지금 현재는 반영이 돼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많은 분들이 산사태 지역에 가 본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사람이 손을 댄 지역에서 대부분의 산사태가 난다는 겁니다. 같은 폭우가 내리더라도 사람이 손 대지 않은 지역은 비교적 산사태가 적고 사람이 손 댄, 거기 임도든 태양광이든 개간이든 꽃밭이든. 왜냐니까 손을 대는 이상 토양 안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높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과학에 가까운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기준은 이런 토양 안정성을 산사태의 취약지구 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 같거든요. 이것 우리 국민들이 여름에 폭우 올 때마다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두 발 뻣고 자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인명피해 난 대다수가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었다는 거지요.

2023년도에 경북 예천에서 산사태로 몇 분이 매몰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도 산사태 취약지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산림청은 임도와 별목이 산사태 원인이 아니라는 보고서를 냈고 행안부는……

행안부 국장님.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본부장입니다.

○**차규근 위원**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행안부는 별목이 산사태 원인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보고서 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산사태 원인 조사를 산림청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과거에 그 기관에서 주도한 데가 과거에 어떤 산사태 유발한 요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과연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솔직하게 다 거기

에 기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저는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실에서, 제3의 기관에서 해야 객관적이고 명확한 산사태 원인이 우리가 확인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재발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도, 제가 산사태 계속하다 보니까 보게 됐는데 산사태가 그 다음 날부터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수곤 교수님이라고 산사태만 나면 언론에 인터뷰하시는 산사태 전문가, 국제 산사태협회 회원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점들을 엄청 답답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양 안정성이 훼손된 때로부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한번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이수곤 교수님께서 우면산 산사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아파트 앞에 2m 높이 콘크리트 벽이 있었는데 산사태가 그걸 쓸고 옆으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피해가 없었대요, 콘크리트 벽 안 쪽은.

그래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산사태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사방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사방댐 필요한 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방댐보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벽 이런 부분을 산간지역이나 집과 주택과 사람의 손 댄 흔적이 있는 산간지역 사이에 설치하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안전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 다음날 산청 산사태 지역에 제가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부리 내부마을 이장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장님 말씀이 자기 바로 위에도 산사태가 났는데 산사태하고 집 사이에 나무 세 그루가 딱 있었는데 그 나무 세 그루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산사태가 내려오면서 나무 세 그루를 치고 옆으로 빠진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완전 45도 이상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 나무한테 고마워하는 거지요. 그게 이수곤 교수님 주장과 일치되는 거지요.

한번 이 부분도 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산림청장 김인호 적극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한번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해도……

○소위원장 김형동 이렇게 하시지요. 또 세 순배 돌 거니까……

○차규근 위원 예.

○소위원장 김형동 그래야 듣는 분도……

○차규근 위원 예.

○소위원장 김형동 안도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안도걸 위원 안도걸입니다.

우리 차 위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 오셔 가지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도 상당 부분 해 주셨고.

저는, 행안부 재난본부장 차관님이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안도걸 위원 여쭙겠습니다.

지금 강릉 있잖아요. 가뭄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134일째 굉장히 초장기의 가뭄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 지금 식생이나 토양 같은 것도 굉장히 건조한 상태이겠지요. 그리고 또 동해안 지역 이쪽은 또 지형상으로도 좀 독특한 특징이 있지요. 팬현상도 있고 또 양강지풍 해 가지고 그 동네에 많이 흐르고 있잖아요. 또 바람길도 있고 해 가지고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가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쪽에 산불이라든가 이런 게 나면 큰일입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지금 비상 모니터링체계, 감시체계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상태인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두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가뭄과 관련해서는 동해안 영동지역 전체가 비가 예년에 비해서 50% 미만으로 와서 기상가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강릉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지하 저류댐이라든지 아니면 저수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가뭄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강릉은 아시는 것처럼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에서 가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산불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여름철이라서 산불은 그나마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곧 가을철로 들어서기 때문에 가을철이 되면 또 가을철 산불대책기간, 위험기간이 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건조한 지역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시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도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모니터링하시고 철저하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를 제가 행안부차관님한테 여쭙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회의 때 지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번에 안동 지역에서 큰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공장지대에 산불이 번져 가지고 공장 설비가 그냥 완전히 전소가 돼 버렸거든요. 저도 현장에 갔고 했을 때 공장 주인 되시지요, 사장님께서 이거를 빨리 설비 투자를 좀 복구를 해서 다시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자금 지원에서 애로가 좀 많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복구 지원 기준을 보면 이게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고 중소기업은 그 대상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경영안정자금대출 이런 게 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절박히 필요한 거는 다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드린 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 그쪽에 신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는 건데 사실상 이것도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공장이 타 버렸고 새로 사실상 신축, 신규 투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런 제도를 좀 활용을 해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보조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거나…… 산자부 소관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논

의가 좀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실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피해를 본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원했던 것은 폐기물 처리를 도와 달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지원,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해서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중기부하고 관련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고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한번 일단 확인해 보겠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걸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재난 복구를 총괄하고 있는 행안부 입장에서 전체적인 복구 지원 기준 체계 개편과 같이 아울러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따로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잘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헬기 도입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쭐게요. 소방청·산림청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소방헬기 있잖아요, 산불 진화 헬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통해 가지고 긴급 헬기를 추가적으로 구매나 임대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소방청이 아마 7 대지요, 산림청이 6대 추가적으로 구매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방식이 있겠지요.

제작 구매를 하는 방안이 있겠고 기존의 헬기를 임대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각기 지금 어떻게 할당이 돼 있고 현재 임대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헬기를 지금 도입을 해서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여쭙겠고, 제작 구매하는 경우에 이거를 지금 어디서 구매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국내산 KAI 쪽에 있는 수리온을 개량한 국산 제품을 구매할 거냐 아니면 이쪽 분야에서 성능이 입증되고 우리가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카모프라든지 외산, 이것을 도입할 거냐라는 문제지요. 우리 입장에서 가능한 우리 국산 제품을 구매를 좀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두 청장님께서 각각 제가 여쭤던 그 사항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십시오.

○**소방청장 허석곤** 소방청장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는 총 42대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와 같이 32년까지 총 7대를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7대 중 4대는 중앙구조본부에, 저희들이 4개 권역별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1대씩을 더 보강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3대는 지자체에 더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주셨는데 소방은 현재 임차 헬기를 이용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전부 다 구매해서 활용을 합니다.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소방헬기는 다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불 진화를 위해서 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와 구급, 그러니까 항공 구급 이송을 위한 이 세 가지 그리고 또 화재 진화, 구조, 구급 이 다목적

용도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구매는 어디서, 국산을 구매할 것이냐 외산을 구매할 것이냐 이렇게 여쭈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현 상황은 구매 기종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 기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구조본부 같은 경우는 중구본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시도 자치단체 같은 데는 시도에서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헬기가 가끔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같은 기종일 때는 다 이렇게 그라운드에 안착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큰 전략은 뭐냐 하면 소방청의 헬기 기종을 한 네 가지 기종, 다섯 가지 기종 정도로 단순화하면서 운용 효율도 높이고 또 임무 수행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는 국산에 있는 KAI가 성능이 뛰어나고 첨단 장비들도 잘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도 마찬가지로 그 헬기를 선호하는 경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기종을 외산을 더 들라면 AW 기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많이 선호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안도걸 위원 예, 알겠고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김인호 산림청의 경우는 지금 임차는 내년도 봄철에 3대를 임차하는데요. 미국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작과 관련해서는 국산 헬기에 응찰한 것은 수리온에 중형 4대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산에 대형 2대가 아마 응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정확한 내용……

○안도걸 위원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형동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산림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숲가꾸기 관련해 가지고 보통 대충 나오면 임도는 비교적 산불 진화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숲가꾸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갈라집니다.

대충 보면 우리가 숲가꾸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400억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활용을 하는데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성과라는 것은 사실은 목재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연평균 한 100억 원이 안 되는, 팔십 몇 억 정도에 그치는 그런 상황인 데다가 또 이게 일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상당히 화재에 취약한 취약성을 좀 강화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산림청의 스텐스는 지금까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까? 장점만 많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산림청장 김인호 숲가꾸기와 관련해서 지금 우려와 또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숲가꾸기 자체의 목적과 방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숲가꾸기를 진행하는 과정 안에 공정성이거나 또는……

○이만희 위원 뭐요?

○산림청장 김인호 공정성.

○이만희 위원 공정성이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그러니까 계약 조건이나 또는 일을 하는 어떤 시스템들의 전반

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엽수만 남겨 놓고 활엽수를 다 제거한다는 숲가꾸기는 숲가꾸기 전체 사업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송이 생산이라든지 또는 침엽수를 선호하는 산주들에 의한 지역 지자체에서의 숲가꾸기의 몇 가지 사례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화하거나 전체 숲가꾸기가 전부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숲가꾸기가 필요한 지역,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물질 제거라든지 또는 숲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노력으로 숲가꾸기는 필요한 지역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마 산림청에 상당 부분 자료는 축적돼 있으리라고 보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산불이 발생한 지역, 그 지역이 숲가꾸기가 행해진 지역인지 또 아닌 지역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만약에 백 군데가 2024년도에 발생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불이, 어떤 기준을 잡아서. 그런데 그 장소가 숲가꾸기와 얼마나 중복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서 보면 상당히 그 연관성 여부를 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요. 그것도 이번에 특별히 한번, 그건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산림청에서 많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준비를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나오면 저한테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자료들을 제가 봤는데 산불의 예방이라든지 완화 또 이런 것에 들어간 전체 산불 관련된 예산 전체와 직접 진화 이런 쪽에 들어간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거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선진국과, 우리도 선진국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어쨌든 보면 전체 예산의 한 4~5% 정도는 예방 같은 부분에 들어간다. 한 십몇 프로 이상을 들어간다고 제가 통계적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 내외가 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예방에 소요된 예산이 한 2.5% 정도, 복구 대응에 들어간 것이 95%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이걸 보면 금액 자체도 6611억이니까 큰 금액이지요. 이게 대형 산불 발생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과 복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의 예산의 배정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만약에 말입니다. 산림청에서 산불 진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아예 산림청에서 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산불 진화와 관련해서는 초동 대응은 소방청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인력 구조와 시스템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불이 갖고 있는 특성, 또 산이 갖고 있는 지형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공중 진화부터 시작해서 또는 지상 진화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산림청이 진화는 하되 소방청이나 또는 유관 부서와 또 국방부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함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데요.

○이만희 위원 어쨌든 사실은 제도개선의 문제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예,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된 부분들이 있고 또 산불과 관련돼서도 끊임없는 교육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진화를 위한 교육이나 기술 이런 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 같단 말이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산림청이 관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방청에다가 모든 것을, 산불이든 무슨 불이든 관련된 부분들을 통합시키면 아까 소방청장이 지적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내 소관이고 여기까지는 내 소관이 아니다’ 이런 소극적인 대응의 자세라든지 어느 쪽에 속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어느 게 맞다고 지금 저도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아까 시·도지사에 대한 그 부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전혀 할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지역의 모든 요소들을 총괄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차라리 그분들한테 산불과 관련된, 진화와 관련된, 예방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좀 시키자, 시키는 것을 좀 철저히 하자. 또 소방은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 같이 있잖아요, 산림은 없는 데도 많지만 좀 떨어져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산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나온 사항이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유관 부처는……

○이만희 위원 이것을 그냥 ‘헛소리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왜 안 된다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형동 차규근 위원님 말씀……

○차규근 위원 감사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산림청장님, 올해 4월 1일 자 언론보도입니다, ‘산불 피해지역 산사태 발생 위험 200배 높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산불특위가 산청을 방문한 이유도 올봄에 산불이 났던 산청 그 지역에서 산사태가 많이 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히려 2009년도에 산불이 났던, 그 이후에 별목이 이루어졌던 그쪽에서 대규모로 산사태가 났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산불 피해지역 산사태 발생 위험 200배

높아’, 도대체 어떤 근거로 산림청 측에서 이렇게 제공을 한 것인지.

이것 관련해서 아까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남원 어느 지번이나 지역인지는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차규근 위원 제가 산불특위 준비하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자료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제출 안 해 주셔서 답답한 나머지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여기 2005년도 4월 27일, 4월 29일 자 기사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전북 남원시 산동면에서 처음 발생한 산불은 산동면과 이웃 보절면 일대 임야 150㏊에 걸쳐 이를 동안 이어졌다’. 그래서 4월 29일에 아마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자료 받기 어렵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한번 항공 사진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2011년도에 이 부분이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이고요 산사태가 이렇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입니다. 2005년도에 산불이 발생했고 5년 후 2010년도에 산림청 산림과학원이 조사해 보니까 산불이 났던 곳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게 200배 높더라라는 그런 연구결과길래…… 2008년도는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이지요. 여기에 보면 산불이 난 그 흔적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산불 나기 전의 위성 사진을 입수해 보니까 놀랍게도 별목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2003년이고 이것도 2003년이고요 1996년도도 이렇게 별목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불 난 데서 산사태 위험이 200배 높다고 그러면 산불 나고 그외에 아무런 어떤 변수 없이 산불이 안 난 데와 비교해야 조사결과가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고 과학 아닙니까? 그런데 산불 나기 전에 대규모 별목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별목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예 제거를 해 버리고 산불 난 데 산사태 200배 높다고 그리고 국회나 국민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국회는 예산을 더 빨리,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돈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심하게 말하면 약간 공포마케팅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래서는 안 되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맞습니다.

○차규근 위원 놀랍게도 여기에 대한 근거가, ‘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 국립산림과학원이 낸 책자 78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도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구보고서가 없대요.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 가지고 낸 결론이지 연구보고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여튼 자료 같은 게 투명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제삼자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연구결과가, 연구가 진행되고 공개되고 이렇게 돼야 그게 신뢰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산림청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청장님, 아까 제가 임도의 산불진화 효과성 조사 용역보고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궁금해서, 그러면 임도가 산불진화에…… 임도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맞습니다.

○차규근 위원 어떤 분은 산불진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산림청 측은. 또 반대

쪽은 ‘아니다. 사람이 더 세진다. 견조해진다’ 이런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특위에서 별도 공청회 하기로 결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연구한 게 있는지 한번 물어봤더니만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받고서 약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냐면 용역 수행기관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예요, 산림청 산하기관이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맞습니다.

○차규근 위원 산림청 산하기관이 이것을 하게 되면 산림청 바깥의 주장이 온전히 반영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나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수행기관 자체가 한계가 있다. 제삼의 기관에 맡기고 그 연구결과가 나와야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믿고 따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그리고 임도 같은 경우에 임도 있으면 산불 끄는 데 도움은 되지요. 특히나 주불은 아니더라도 초기나 잔불 정리하는 데 가서 더 쉽게 차량이 진입하고, 그것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1km 놓는데 3억 듭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리고 임도 놓는 데 포크레인 들어가고 하면서 토양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나무하고 토양하고 어느 쪽이 탄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가 알고 계시지요? 나무가 17%, 토양이 72%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렇게 임도를 개설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지속가능한 산림경제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길이 있어 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불 끄는 데 더 도움이 돼’ 이렇게 하면 너무 단편적인 접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장님……

○산림청장 김인호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질의하실……

○차규근 위원 제가 좀 더 말씀을……

그리고 산림청에도 드론으로 진화하는 부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산림청장 김인호 부서는 없고요 앞으로 드론으로 진화를 해야겠다라고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차규근 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는 진화 실적이 있던데, 2~3년 내에는 실적이 없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산림청장 김인호 일단 실효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공중의 진화를 하는 데 수간이 밀폐돼 있는 곳은 물이 밑에까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압이라고 하는 게 조그만 데서 나오는 것이 효력이 없어서 저희 조사 내용에 지금 아마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위원 제가 최근에 국회에서 한 토론회에서 드론 진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주의 깊게 봤고 그 관련자들도 면담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일단 적어도 우리가 산불진화를 위해서 헬기 더 구입하고 뭐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맞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데 헬기 1대가 쌈 게 30억 많으면 150억. 그런데 드론은 5000만 원. 또 헬기는 1년 내내 가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까? 또 격납고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조종사 연봉도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일단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춰 봤을 때 드론 진화가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나라 이야기라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제가 드론 기술이 발달한 중국 소방당국의 산불진화 영상을 보고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론이 가 가지고 소화재로 해서 불 끄는 그런 영상이고 제가 국내 기술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1대가 아니라 군집으로 해서 하게 되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도 용도도 사실 주불 진화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맞습니다.

○차규근 위원 소방관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주불에 하면 다 죽는대요. 초기 진화 또는 잔불 정리하기 위해서 야간에 바람이 적을 때 임도가 이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도 용역보고서도 보니까 다 야간에서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들이더라고요. 주간에는 없어요. 그러면 초기나 잔불 정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임도가 여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 것하고, 저는 드론 같은 경우도 주불 끄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고 잔불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드론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는가.

○산림청장 김인호 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길을 올라가 가지고 하는 전통적인 산불진화의 패러다임을 좀 탈피해야 되지 않는가. 중국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 산불진화의 테크니컬한 패러다임 변화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도입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리고 산림재난통제관님, 아까 전에 와 계신 것 같던데……

○산림청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예.

○차규근 위원 제가 면전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저도 마음이 약간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산림청 산림보호국의 산림재난통제관이 2022년 12월 29일에 신설됐더라고요. 담당 업무가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 관련 업무 총괄이신데 2022년 12월 29일 신설됐고, 2023년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무고한 국민들 두세 분이 경북 예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초 산청·가평에서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 안 된 데서 무고한 국민들께서 다수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무런 징계를 안 받으셨더라고요. 저는 기후재난 시대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산사태 취약지구 평가기준, 그전부터 민간위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고 그전에도 민간 저널리스트들이, 전문가들이 산불과 산사태의 원인 관련해 가지고 거칠지만 투박하지만 많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 하고 그냥 외면했던 이런 모습들을 저는 산림청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계신 통제관님께서 2023년 그 당시 담당 국장님은 아니신 것 같기는 한데 올해는 가평하고 산청에서 무고한 인명 피해가 났을 때는 담당 국장님이셨잖아요. 우리 부모가, 우리 친인척이 잠자고 있다 갑자기 그렇게 변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있고 조직만 늘어나고,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이고 예산 지원입니까? 한번 처절하게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구 평가기준부터 해서 임도나 여러 가지 숲 가꾸기 문제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철저하고 냉정하게 한번 진단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 임도 관련해서 산불 진화의 효과성 문제도 아까 자체적으로 있었습니까는 바람 영향 있지 않습니까? 임도가 산불 진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의 근거가 임도 만들면 바람이 잘 통한다라는 그 주장이 근거 중의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차규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인데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발간한 책자에 의하면…… 그것 PPT 화면 좀 띄워 줄래요?

저기 보시면 산림청 산하기관에서, 산림과학원에서 발간한 책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연 상태의 소나무 숲 내부는 외부 바람 세기의 20~30% 수준이다. 간벌하고 하면, 그 아래 보시면 약하게 간벌하면 59~60%, 강하게 간벌하면 내부는 외부 바람 세기의 70~80% 수준으로 바람이 더 세게 지나간다고 산림청 소관기관도 저렇게 자료에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림청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또 그 정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런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도 관련해서는 향후에 산불특위에서, 아직 공적인 날짜가 결정은 안 됐습니까는, 제삼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번 이게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 아까 드론이나 새로운 산림 화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가장 최적의 대안이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산림청에서 제삼의 기관에 연구용역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형동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산림청장님께 숲 가꾸기 관련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불에 있잖아요 조금 내성이 높은 방향으로 산림을 조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한 40% 정도가 침엽수 위주의 그런 단일림이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 것은 학계의 정설이 맞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다면 방향은 저는 활엽수 중심의 혼합림으로 이것을 바꿔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우리나라 산림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의 산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인데, 아무래도 침엽수를 기르는 게 훨씬 경제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활엽수로의 전환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공익형 직불제, 직불금이라든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산림 구성을 바꾸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되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또 탄소배출권 이것을 적용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탄소 흡수 능력이 높은 활엽수림의 조림을 늘릴 경우에는 탄소배출권에 있어서 혜택을 좀 받도록 하자라는 것도 있고 또 세 번째로 재해보험 있잖아요. 이러한 보험료 납입 기준에 있어서도 활엽수 쪽의 조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유리하게 하자라는 이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대안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신 청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대안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인 검토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름대로 향후의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를 어떤 방향으로 두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취약한, 즉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토양 자체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건조하고 그리고 바위 위의 토양층이 얕은, 토층이 얕은 것이지요. 그런 곳에 견디는 좋은 나무 중에 하나가 사실은 침엽수고요. 침엽수가 우점종을 이루다가, 즉 주인공이 됐다가 이게 활엽수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천이 과정으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침엽수, 특히 소나무림은 저희에게 목재뿐만 아니라 송이라고 하는 생산에 되게 중요한, 임산물 생산의 숲이었기 때문에 선호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대형 산불 등등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조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단일 수종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피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잘 아시는 소나무재선충이나 소나무좀이나 솔잎흑파리 등등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혼효림 또는 활엽수림으로 바꾸는 것이 대부분의 지금 산림 정책으로 가고 있었던 분위기인데 사실은 기준에 있던, 침엽수들을 갖고 있던 사유림들이 지금은 산불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숲 가꾸기나 조림이나 또 다른 수종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여러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그렇게 변경됐을 때의 산주들에 대한 어떤 보장 이런 것들을 경제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말고도 전체적으로 산불특위의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산림청에 대한 걱정과 우려 이 부분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산림청 내부의 공직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림청이 개청 이후에 50년 넘게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 일에 많은, 혁신적인 성과를 내 왔는데 지금 많이 빡빡해지고 그 빡빡해진 속에서 과연 숲을 어떻게 가꾸고 미래의 우리 숲은 어떤 모양새를 가져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해 볼 생각이고요. 그 측면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측면의 산림 경영과 산림을 가꾸고 또 보존하는 측면의 노력들을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서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준비를, 혁신적으로 많이 뜯어 고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종합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고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하신 보고 내용은 저희가 꼼꼼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를 불식하고 산림청이 사람을 살리는 숲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신의 힘을,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저도 간단한 것만……

○**소위원장 김형동** 예,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청장님, 국내 산 중에 종 다양성을 위해서 보존림으로 되어 있는 곳이 전체 산 중에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산림청장 김인호** 비율로 따지면 사실은 30% 정도는……

○**임미애 위원** 30% 정도?

○**산림청장 김인호** 아니요, 30% 정도는 경영을 위해서……

○**임미애 위원** 경영림을 30%?

○**산림청장 김인호**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 것은 30%고 실제로는 휴양과 또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한 70%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보존림으로 되어 있는 곳 중에도 사유림이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산림청장 김인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유림들은 사실은 보존적 측면의 가치 때문에 본인들이……

○**임미애 위원** 그러면 보존림의 경우에, 그러니까 임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임도 개설이 주로 경영림에 개설이 되나요, 아니면 그것 구분 없이 임도가 개설이 되나요?

○**산림청장 김인호** 사실은 경영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도는.

○**임미애 위원** 경영림 중심으로?

○**산림청장 김인호** 예, 그런데 일부 지자체별로 임도 개설이나 산지 경영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존이……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경영림 중심으로 임도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경영림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임도는 필요한 것인데 임도를 해 놔 놓고 사실은 바람이 빨라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간벌하는 데 있어서 강간벌 하는지, 약간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불이 났을 때 조건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산림 경영을 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맞습니다, 예.

○**임미애 위원** 중요한 것은 임도를 해 놔 놓고 관리도 안 되고 임도가 개설해야 되는

곳에 개설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부실하게 개설이 되고 이러면서 산사태와 연관이 되어지는 것 같고 이러니 전반적으로 산림청 사업에 대해서 불신이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도가 불필요하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임도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제대로 설치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요. 이후에 저희 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이 제도개선특위 소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부처에서 오신 분들께서 잘 귀담아들으시고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차규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소위원장 김형동 아닙니다. 3당이 지금 모여 있는데 당 기준으로 보면 적절하게……  
하십시오.

○차규근 위원 감사합니다.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김인호 예.

○차규근 위원 제가 지난번 산불특위, 그러니까 지난 산림청장님이 여기 계셨을 때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산림 카르텔’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들어 봤습니다.

○차규근 위원 제가 자료도 요구해서 받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 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내용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투명하게 그리고 ‘카르텔’이라는 말을 해소할 수 있게끔 새 청장님께서 각별하게 산림청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청장 김인호 예.

○차규근 위원 그다음에 청장님, 이 사진 한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8월 19일 날 이번에 경북에서 났던 산불, 고운사라고 이번에……

○산림청장 김인호 고운사, 예.

○차규근 위원 사찰 화재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근처에서 불탄 나무를 벤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바깥의 수피는 탔지만 안에는 다 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일반 국민들은 산불 나면, 수관화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그냥 나무가 홀라당 안쪽까지 다 타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인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8월 19일 날 고운사 근처에서, 바깥에 시커멓게 탄 흔적 보이지 않습니까? 안쪽은 그런데 살아 있다는 것

이지요.

저는 산불 난 지역의 산불 피해목을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산불 피해목이니까 죽은 나무다, 이제 쓸모없는 나무다 해서 벌목을 하고 그것을 미이용 바이오매스로 사용하는 그런 또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그래도 고운사의 경우는 자연 복원을 하겠다는……

○차규근 위원 예, 고운사 자연 복원은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예, 맞습니다.

○차규근 위원 지금까지 산림청에서 했던 그 행정들이,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국회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산불 피해목, 산불 피해 났고 또 산불 난 나무들은 쓸모없는 나무니까, 시커멓게 다 죽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벌목하는 예산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미이용 바이오매스로 칩을 만들어 가지고 화력발전소로 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우리가 발전이나 전기 그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직 살아 있는 나무, 안쪽이 살아 있는 나무라면, 우리가 인가 근처에 있는 그런 나무야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가 근처의 나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리 내부마을 사례처럼 오히려 나무가 안쪽이 살아 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산사태를 막아 주는 보호벽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불 난 지역의 나무라고 해서, 시커멓게 타 가지고 이렇게 뭔가 산불 피해목이 정상적이지 않은 나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벌목하는 그런 행정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원칙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사유림의 경우 산주들이 불에 탄, 또 심재는 좀 살아 있는데 번재가 그을려서 사실은 좀 놔두면 이것을 극복하고 살아 있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뭔가 개별이나 또는 정리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부득이하게 지자체가 그런 복구를 위한 조림용으로 벌채를 하게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것들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산림청과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복원이나 자연재생할 수 있는 수목들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저는 관련해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산불 난 이후에 복원할 때 그 산주들의 의사를 많이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예, 맞습니다.

○차규근 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산주들의 의사를 너무 그냥 따라가서는 이 산에 관한, 숲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인 산림청의 존재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산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무가 병충해에 더 강한지, 어느 나무가 산불에 더 강한지, 어느 나무가 산사태에 더 강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 많이 심고 있는데 어떤 분은 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편백나무는 지진에 되게 취약하답니다. ‘지스베리’라고 땅 지(地) 자, ‘스베리’라고 ‘미끄러짐’ 그래 가지고 일본에서는 지진 나면 지스베리라 그래 가지고 편백나무가 그냥 뿌리째로 미끄러져 버린다고 합니다. 삼나무하고 편백은 천근성, 뿌리가 얇게 옆으로 퍼지는 성격이 있어서 지스베리라고 전문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진에 취약한, 그냥 나무가 통째로, 뿌리째로 미끄러져 가지고 산사태가 나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산주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나무를 심었을 때 재난의 어떤 취약 요소가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제가 영월에서 만난 임업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숲 가꾸기를 하시면서도 가장 무서운 게 산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산불 나 버리면 모든 게 다 재가 돼 버리니까 산불 나는 게 제일 겁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산불이나……. 지속가능한 임업, 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해서는 이런 재난에 대해서 어떤 점을 아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결산림청이나 산림청이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고 전문성을 보여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론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드론 진화 현장 투입 사례가 2021년은 5건, 2022년은 67건이나 되는데 2023년·2024년·올해는 제로거든요. 그게 좀 궁금한데 그거는 왜 그런 것인가요?

혹시 뒤에 계신 분 말씀하셔도……

앞쪽에 나오셔서 마이크 대시고.

#### ○산림청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입니다.

진화용 드론, 아까 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 위에서 드론이 뿌려 주면 이 소화약제가 밑에까지 안 닿는 비효율성이 있어서 좀 낮아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때는 개활지에서 난 산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추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배터리 소모가 과다하고 비행 시간이 통상 한 10분 정도밖에 그전에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크기도 좀 크게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과거보다는 좀 오랫동안 정차할 수 있고 그래서 군집드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양은 적지만 여러 대가 같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멀리서도 조정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군집드론의 활용도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드론 압축 에어로졸 진화탄 시험연구 결과 자료를 보면 이미 총 중량 50kg의 압축 에어로졸 20m 높이에서 분사해서 진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아마 개활지에서는 효과를 좀 봤는데……

○산림청장 김인호 보고 있었다는……

○차규근 위원 그것 아닌 것은 약간 아직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맞습니다.

○차규근 위원 최근에 제가 만난 드론 전문가 말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고 지금은 군집으로 해 가지고 20대 정도, 50kg 하면 한꺼번에 1000kg 정도 함께 뛰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림 경제림, 산림 경영림 이런 데는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임도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비경제림의 경우에……

그런데 산불 진화용 임도라고 따로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불 진화용, 경제림의 목재 생산을 위한 임도가 아니라 산불 진화용 임도라는 용어를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이런 초기 진화나 잔불 정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예산 절감적이고 더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올해 산불에서 네 분이나, 민간인 스물일곱 분 말고 산불진화대원하고 민간인이, 소방관하고 공무원이 네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이 드론의 기술을 잘 활용하면 그런 피해도 적지 않겠어요? 임도는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드론의 진화 역량을 더욱더 개발하시고 이것을 향후에……

소방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소방청도 드론 진화 기술도 많이 개발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소방청은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저희들은 현재 산불 진화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 우리가 일반 건축물 화재에 쓰는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이 저희들이 드론에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을 하게 되면, 감지를 하면 그 열의 분포 방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 진압을 할 때 화재가 진행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연소 확대되는 방향을 사람 눈으로 관측할 수 없는데 드론을 이용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있고 또 저희들 같은 구조나 구급 업무에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수해나 이런 것이 일어나 가지고 실종자가 발생됐거나 할 때 드론을 활용해서 수색하는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형동** 다 하셨습니까?

**○차규근 위원** 예.

**○소위원장 김형동** 다 가 버렸어요.

(웃음소리)

긴 시간 하셨는데요, 저 한 두세 개만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방 부서에서는 안 오셨지요?

당부와 염려가 있어서 하나 말씀, 특히 행안부 재난본부장님, 산청에 갔더니만 이번에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그립니다. 지난번에 산불 대응할 때 몇 분들이, 진화요원들이 안타까운 인명 사고를 당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아마 군수까지 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경남도에서도 나오신 분들이 재난 관련된 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기피 부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뒤에 사족은 안 붙이겠습니다. 정말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기피…… 물론 예방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수사선상에서, 지금 복구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한번 그분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중과는 안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소위원장 김형동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산불 진화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산불이든 들불이든 이번에는 경북 북부 지역에는 사실상 마을에 전부 불이 붙었지요. 가끔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도시가 불에 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불’ 자가 붙었으면 총동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여기 3개 부처가 나와 계시지만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 거다, 저기 거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불을 보면 일단 끄고, 끄는데 총화를 다해야 되고 그거는 지자체가 제일 잘 하겠지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좀 커졌을 때는 이것은 전 자원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여러 개 부서가 불 끄는 데 주력은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제도개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오늘 환경부는 왜 안 나왔습니까?

다음 제도개선할 때는 해당 법률안이 아마 통과될 가능성, 이후에 다시 볼 가능성이 있는데 충리실 산하에 이번에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도 만들어져야 되지만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이것은 예방에 대한 제도개선입니다—연장선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잘된 것은 본인 탓이고 잘못된 것은 네 탓이다, 산불이니까 네 책임이다. 불은 산에서 났는데 피해는 들이나 집이 더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차규근 위원님께서 임도의 효과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까지 해 보자라는 제안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임미애 간사님하고 의견을 나눠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악산이고, 그것은 임도도 못 닦습니다. 그러면 드론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임도라는 것은 경제림을 베어 내는 용도 플러스해서 산골의 어떤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한 다양한 포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고. 일본이나 독일, 산림 선진국의 예도……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발표하는 거하고 어느 분이 발표하는 거하고 같은 사례를 놓고 달리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공청회 할 때는 좌우 의견은 있어도 좋은데 보다 객관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규근 위원님 모시고 갔다 와 봐야 됩니다. 실제 임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임도의 양이나 질이나 폭까지도 보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도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확인하시겠다고는 하셨지만 산자부는 오늘 나오지는 않으셨지요? 그다음에 중기부나 이런 부처에서도 누가 그것을 소통합니까? 안도걸 위원님이나 곧장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차원에서 확인해서 각 위원들께 답변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차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건의 사항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소위원장 김형동 예, 말씀하세요.

○차규근 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산불특위로 산청 현장에 갔을 때 그때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하고도 같이 상의했던 부분, 그때 위원장님께서 약간 공감을

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산불특위가 10월 말까지로 활동 기간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 문제가 산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사태하고 연관성도 좀 있고…….

○소위원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산림 경영이나 이런 산불·산사태 재난에 대한 대응 부분을 저희가 산불 나고 산사태 났을 때 반짝 관심을 가지고 그 뒤로는 또 잊어 버리고 또 재난이 그다음에 됐을 때 반복되고 이런 부분을 이제는 스톱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산불특위의 이런 부분들을 기간 연장을 해서 자주 열지는 않더라도 조금 더 꾸준하게 한번 점검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견의를 드립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공감을 좀 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김형동 전적으로, 요새는 조국혁신당이 하자면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날 나왔던 얘기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청장님의 바꿔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쉬운데, 산림청장이 바꿔셔 가지고, 조사하는 거와 관련돼서 산림청이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넓히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 그 기한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차규근 위원 제가 그러면 기한을……

○소위원장 김형동 성안을 해서 한번 주시고.

○차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형동 특위와 관련돼서는 김정호 위원장님하고 양 간사가 그때 다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모르지요, 민주당이 또 수를 앞세워서 하기 싫다고…….

○차규근 위원 민주당은 제가 한번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형동 하여튼 조국혁신당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형동 신성범 안도결 이만희 임미애 차규근

### ○첨가 위원(1인)

임종득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황충연

전문위원 나아정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사회재난대응국장 김중열

소방청

청장 허석곤

119대응국장 박근오

산림청

청장 김인호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훈

임시회록